

주소를 잃은 한 소설가의 편지

지난 8월, 독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뺏겼다는 내용이였다. 가감없이 그가 보내온 사연을 그대로 실는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나 구라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하여 줄지에 주택을 잃고 전가족이 길가로 내쫓겼다고 가정해보자.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 개인의 재산권·생존권 박탈이 된다. 우리는 이 같은 법률피해자들의 아픔과 불행을 볼 때 단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그것을 개인의 일이나 혹은 재판계류중인 사건으로 외면해버려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엄밀히 말해 인간사란 개인과 집단이라는 외형적·형식적 차이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 아닌 게 없다고 본다. 누구라도 살아가다보면 뜻밖의 불행을 만날 개연성은 다 있는 것이고 명분이야 어쨌든 '밥 먹고 살자'는 기본적인 욕구의 당위성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 개의 새강이 합류해 큰 바다를 이루듯 개인을 배제한 사회와 국가 건설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오늘날의 방송·언론 매체의 사명감은 실로 막중하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혼재해 날로 복잡해져가는 시대와 정치·경제·사회풍조 속에서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치 민주국가이며 인간의 참된 삶의 본질인가를 부단히 감시·비판·보도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회정의와 시민(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출발한 시민단체·법조인단체 역시 이 같은 법률피해자들의 아픔과 인간존엄에 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공익을 위한 올바른 '신문고'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 같은 사회 공동선에 대하여 짐짓 회피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보면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시점에도 여전히 성역 아닌 '성역'으로 남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재판으로 '유전무죄



한천석
소설가, 현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법일부락 거주

이 사건의 재판을 번복해달라는 구걸도 아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붕괴되는 것은 부실 시공된 건축물·다리뿐만이 아니다. 법이 무너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무전유죄' '부익부 빈익빈'의 인권침해와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뒤틀린 경제정의를 바로 잡을 길이 요원하다.

이 땅에서 가장 개혁이 더디고 권위주의적인 데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아닐까 한다.

감히 자부하던대 문인 역시 사회의 한 공인이다.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정 예인으로서 지조와 당찬 자존심 하나로 역지를 부리지도 못하고 억지나 불의를 그냥 용납하기도 어렵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수십년 살아온 소유권 보전 동기가 경료되어 평화롭게 살아온 주택을 거저 빼앗기다시피 하고 타인의 다 쓰러져가는 빈 창고 안에 가족들과 함께 불편한 몸을 눕히고 밤을 지새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허무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 건물철거 등 사건에서 주택소유권자를 패소시킨 1, 2, 3심의

'이유'가 각기 다른 것은 그 모두가 엉뚱하다는 결론이다. 국가권력의 이 같은 '횡포'를 그냥 방치해두면 그 '흉기'는 갑의 발등만 찍는 게 아니고 을의 발목도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똑똑히 알고 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어느 특정인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이제 이 사건의 재판을 번복해달라는 구걸도 아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붕괴되는 것은 부실 시공된 건축물·다리뿐만이 아니다. 법이 무너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 사건이 과연 '수입오렌지족' 이야기 정도에도 못미치는 거리일까? 이것이 현재 이 나라의 정신문화 수준이며 문인의 위상이다. 하기사 하늘·땅 모두가 내 집이거나 생각해보면 못살 바 아니지만 오늘 이 땅의 문학적 지성의 공백과 무력감은 실로 크다. 이 사건을 후일 이번에는 소설로 '재판' 해볼 결심이다. **한천석**

“‘법조문으로 묶어놓고’ 타인의 주택까지 헐값에 빼앗아가는가?”

그 쓰고 있는 사람으로 재산이라고는 23평 정도되는 주택 한 채가 전부다. 집터만 타인의 소유이나 당초 토지와 주택이 동일인의 소유이던 것을 매입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경료되어 있는 집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는 관습상 법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건물인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원토지소유자에 적정한 지료(地料)를 지불해가며, 별 이의없이 평은 공연하게 26년 여를 살아오던 중, 근년에서야 새로 들어선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현시가에 절반액밖에 안 되는 3000만 원을 줄 테니 집(소유권)을 팔고 나가란다. 부당하다고 여겨져 그 제의를 거절했던 바, 토지소유자는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주택소유권자가 전주택소유자를 순차 대위하여 원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약정되지 않은 지상권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2심에서는 지상권에 대하여는 1심과 같고 엉뚱하게 주택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주장한 것처럼 논리조작까지 해가면서 청구취지를 변경 금 1,209만 6,000원에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고 주택을 명도하라는 취지로, 3심에서는 지상권 갱신 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함에도 4년이 경과된 후에 행사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유지, 상고 기각했다.

문학 외길, 25년을 힘겹게 걸어오면서 법적·도의적으로 아무 과오도 없는,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형편으로 법정대리인도 없이 4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당해야 했던 심적, 정신적, 물적 등등의 피해와 고통이 참담했다. 글 쓰는 작업에도 막심하게 타격을 받았다.

이곳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주택소유권이 없으면 제 토지상에도 신축건물이 허가되지 않는다. 즉, 재력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집보다 건물소유권을 챙기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구가옥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호화별장 혹은 대형 음식점 등을 지어 손쉽게 부를 축적해간다.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부의 축적이 최고의 가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논리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그 부의 효용성과 정당성도 분명히 한계를 가져야 하는

당위성도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집을 임대해 살아도 계약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미리 계약기간 경신통지를 안 해주고 지나가면 계약기간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인정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체의 것은 정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시효란 사용과 시간에 의하여 생기며 법에 의하여 실체를 부여받은 권원(權原)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 함은 즉, 법 내용상의 평등으로 이해돼야 한다.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판별 없이 형식적 자구(字句)나 법조문에만 쫓아맞추어 일률적,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법은 권리의 규칙이며, 사실에 따라 작용한다. 재판이란 민·형사간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공기 좋고 물 맑고 경관이 수려한 이곳에 와 26년 여를 살아오는 동안 사경을 헤매던 병고(病苦)도 상당히 회복됐으며, 문단에 데뷔하여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인 소설가로서 8편의 저서와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다. 주택은 글을 쓰는 공적 업적의 창작산실이기도 하다. 근래 이곳 주변사정이 좋아지고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새로 들어온 토지소유자들은 제 이익만 충족시킬 목적으로 헐안이 되어 날뛴다. 이 동네에서도 대형 갈비집, 보신탕집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곳은 건물 자체보다도 ‘권리금’이 더 고가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과 한 개 값이 안 맞으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가족 전체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집을 팔고 안 팔고는 주택소유권자가 먼저 결정할 일이고, 가사지상권이 소멸되었을 경우라도 집터(토지)만 내어주면 되는 것을, 어찌서 토지소유자와 사법부가 합세하여 ‘법조문으로 묶어놓고’ 타인의 주택까지 헐값에 빼앗아가는가?

민법 제285조 2항은 “지상권이 소멸했을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상고심은 ‘이유’를 ‘사정’으로 교묘히 논리조작하고 있음)가 있어 거절했는데도 금 1,209만 6,000원에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고 주택을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밭일부락'에 있는 한천석 씨의 문제의 집

명도하라는 것은 법을 빙자한 강탈행위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판결 이유를 본다.

첫째, 주택건물이 건립되어 법정지상권을 원시취득한 것은 1957년이고,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는 1987년도이나 그후 1988년까지 원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가며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별 특약 없이 평은 공연하게 살아온 사실 등을 원토지소유자도 1, 2심 재판 때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지상권은 3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져 복시 갱신돼 연장됐다는 주택소유자의 주장, 입증에 대하여 상고심은 “지상권 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것을 4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했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라고 지상권이 갱신된 시점과, 주택소유자와 증인이 주장 입증 사실 등을 모두 왜곡시켜놓고 있다.

둘째, 상고심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단지 감정가액일 뿐인 금 1,209만 6,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치했으나, 이것은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판단으로 어린아이도 수궁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소유자 스스로도 금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어찌서 그 절반액에도 못미치는 가액을 상당하다고 보는가? 주택소유자가 건물의 현시가액이 금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때, 원고측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항변도 없었고, 다툼 반증도 없다. 재판부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셋째, 1995년 6년 1일 건물명도 강제집행 당하여 주택소유자의 가정은 일시에 풍비박산되고 가족들은 길가에 내쫓겨 있다. 과연 이것이 양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인지 묻고 싶다. 이 같은 피해자가 이 동네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특히 경관이 수려한 지방 일대에는 이 같은 억울한 법률피해자들이 부지기수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 판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어찌서 왜곡된 법리해석과 불공정한 판결로써 주택소유권자의 소유권·재산권 등의 ‘권리’를 빼앗아 재력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주어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다. 양심은 법관의 ‘필수품’이다. 이제 펜 한 자루에 의지해 이 사건의 진위를 밝혀나갈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이 나라 부익부 빈익빈의 뒤틀린 경제정의와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법부도 이제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 좀더 국민 앞에 공정하고 친절히 다가와야 하며, 국민 개개인은 물론 언론 및 시민단체들 또한 공동선(共同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위법·불법·편법이 판을 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 **정인**



세상만사 이러쿵저러쿵

대전과 안동

장기수들이 오랜 감옥생활로 말미암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수들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장기수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하루 빨리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식을 들은 YS가 비서관을 불렀다.

“장기수가 누군데, 그 사람 아픈 게 그렇게 말썽이까? 김기수는 내 비선데, 장기수는 누구?”

“각하, 장기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참말이고요?”

“예,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어 석방해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온정적 차원에서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됐다, 나가 보래이.”

비서관이 막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여는 순간 YS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디, 내가 한 번 직접 가서 봐야겠다. 준비하거라. 그런데 말썽난 데가 어디가?”

“예, 각하, 대전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입니다.”

이 말에 YS가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아이디, 놔두래이.”

비서관이 돌아간 뒤에 YS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전, 안동, 휴우... 충청도와 TK, 거 참 어디 가나 문제라’

법치(法治)

이기택 계 의원 한 사람이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히려 DJ를 방문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화제가 YS로 돌아갔다.

“이사장님, 사실 YS가 개혁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

“YS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놓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치(人治)였다고 말입니다.”

“그래? YS도 이젠 그 사실을 깨달았겠지.”

이기택 계 의원이 다시 말했다.

“왜 아니겠습니까. YS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민치(民治)다. 나는 민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DJ가 말했다.

“아니야, YS는 민치를 좋아해. YS한테 민치 선물 안 받은 사

람 있던가?”

형평성

정부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형사범, 공안 관련 사범 등 3169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은 대규모 사면 복권 조치를 통해 각종 비리와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구 여권 인사와 경제인 공무원이 대거 사면 복권됐다.

그러나 시국관련 구속자는 전체 구속 양심수 465명의 53%에 지나지 않는 25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달았다. 시민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있자 정부 관계자가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 복권 조치가 결코 형평성을 잃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기네스 북에 오른 김선명 씨가 45년, 안학섭 씨가 43년, 한장호 씨가 39년을 복역했으니 벌써 127년 아닙니까? 구 여권 인사들 복역한 거 다 합쳐도 이 세 사람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래도 불공평하다고요? 내 참...”

자원재활용

광복 50년을 맞이하여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철거했다. 그런데 철거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친일 가요인 <감격 시대>를 연주한 것이 말썽이 됐다. 뒤늦게 이 말을 전해들은 YS가 김기수 부속실장에게 물었다.

“기수야, 감격 시대가 참말로 친일 가요가?”

“예, 각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만...”

YS가 손을 저어 부속실장의 말을 막았다.

“폐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랬겠재.”

며칠 후 한국은행 부산 지점에서 폐기 대상 지폐 유출 사고가 발생해 김명호 한국은행 총재가 물러났다. 한 직원이 ‘버릴 돈’을 무려 3억 5000만 원이나 빼돌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후임 총재에는 이경식 전 부총리가 임명됐다. 이경식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YS가 말했다.

“자원재활용도 좋지만 버릴 돈을 재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경식 총재가 돌아간 뒤 YS가 중얼거렸다.

‘정말로 재활용해서 안 될 건 DJ 아이야, 휴!’

YS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참여**

특 집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시민운동진영 내에 주장은 엇갈려 있다. 우선 얼마 전 '정치개혁'을 주창하며 발족한 '정치개혁 시민운동연합'이 그 논쟁의 핵심에 있다면 시민운동의 고유한 역할과 임무를 들어 정치운동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본지에서는 시민운동진영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마련했다. 먼저 정치참여에 반대하는 글로는 황주석 씨의 "시민운동 정치세력화 신중해야"를, 정치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는 유종성 씨의 "시민운동, 정치참여에 나서야"를 실는다. 그리고 윤도현 씨가 '독일 녹색당의 경험'을 소개하고 덧붙여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 대토론회인 '정국 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을 실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지당 손학규 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 의원, 민주당 제정구 의원, 정개련 성유보 선생 등이 참여하여 각각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이를 재구성했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신중해야"	황주석
"시민운동, 정치참여에 나서야"	유종성
독일 녹색당으로부터 배운다	윤도현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	의정감시센터 -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 대토론회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신중해야”

함주석
광명 YMCA 총무이다.

사회운동은 다른 분야로 대치될 수 없는 사회발전을 위한 고유 의무와 영역이 있다.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을 향해 발전한다는 단계설은 위험한 논리다. 시민운동 역시 변화된 시대를 맞아 고유한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자기 중심을 형성해야 한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 가고 있는 ‘대중’의 힘과 가치를 변화와 개혁의 주도세력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대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던져진 민족의 과제는 대외적 자주와 자립, 정치적 민주화, 경제발전과 경제정의였다. 그러다가 현대로 들

어오면서 분단의 극복이란 새로운 과제가 추가 됐다. 우리는 주어진 이 과제들을 해결해오는 한편 새로운 과제들을 더해가고 있다.

역사 속에 던져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지도층과 민중들과의 괴리였다. 민중이 보다 잘 살아보려고 일하면 일할수록 착취는 심해졌고 자주를

정치개혁의 과제는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그 맡은 분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진은 새정치국민회의 상임위 회의.



향한 봉기는 오히려 지도층에 의해 토벌됐다. 한반도 역사 과제의 미해결은 바로 민중의 힘과 하나가 되어 이를 결집하는 지도력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이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회운동권에서는 너무 일찍부터 이를 공부해왔고 이제는 오히려 진부할 정도가 됐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사회에 누적되어온 고질병을 치유시킬 수 있는 기본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집권층은 물론 뜻있는 국민 모두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잘만 되면 후대의 역사 속에 집권자는 성군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국민들은 존경의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 국면을 개혁국면이라고 부른다. 개혁의 과제는 전 영역과 부문에 걸쳐 놓여 있으며 그 만큼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변혁을 자기 임무로 하고 있는 사회운동권은 개혁국면을 맞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중참여만이 진정한 개혁을 기약한다

개혁국면. 이 말은 오늘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냉전잔재까지 더해져 꼬이고 비틀린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개혁의 요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것으로 얽힌 실타래 마냥 엮갈려 있어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접근방법과 총체적인 개혁역량의 참여 없이 해결은 불가능하다. 과연 그 접근방법과 개혁역량의 총참여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대중의 지혜와 참여를 바로 이뤄내지 못하는 한 이 과제는 풀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풀어낸 현대사의 과제였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과정들을 통해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민주화의 주체는 대중이었다. 정치지도자들

의 목숨을 건 투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4·19, 5·17, 6월항쟁 등의 대중참여가 없었다면 문민정부의 탄생도 없었다. 박 정권 시대 경제개발이 양에 있어서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때보다 박 정권 시기 우리 민중은 열심히 일했고 긴 시간 일했다. 국민 누구나가 잘 살아보세를 노래했고 빨리빨리가 국제어가 됐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중은 억압받고 정권은 부패했으며 재벌들은 비정상적으로 자본을 축적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경제성장에의 마이너스 요인보다 민중의 참여에 의한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 경제성장의 결과를 놓고 박 정권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되는 것을 보면서 깊이를 보지 못하고 겉테기만 보는 의식의 알팍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김영삼 개혁'의 한계와 오류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의 획득과 사용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의 위임과 참여다. 권력의 획득과 사용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항상 문제가 돼왔고 권력의 위임과 참여는 변질되고 왜곡돼왔다. 정치개혁이란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로서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출범하게 되었지만 과거의 대표적인 군부독재 정권 핵심들과의 연합으로 출발했기에 이미 그 개혁주체의 내부에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는 과거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좁게 만들었고 개혁주체를 불안한 상태로 만들었다. 개혁안의 총론은 명분에 있어 타당했지만 각론으로 갈수록 더구나 실천으로 갈수록 개혁은 흐려지고 실리를 놓쳐나가고 있다. 이는 결국 정권창출의 과정이 가져온 개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을 향해 발전한다는 단계설은 위험한 논리다. 그렇게 될 때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에 종속되고 배출구조로 전락된다. 오히려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의 모태이며 기반이다. 사회운동 경험이 정치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정치운동의 하부구조, 배출구조는 아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권력도
다원화된다. 정치권력,
사회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정보도 도덕도 권력이 된다.
사회운동은 사회권력, 즉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 휘청거리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화의 주역인 대중을 방관자로, 관람객으로, 잘해야 비평가로 전락시킨 현 개혁주도 세력의 오류에 있다. 현 정부는 개혁에 대한 압박감으로 또는 내부의 견제세력에 대한 긴장으로 또는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자만으로 개혁 이군인 국민대중에게도 권위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개혁의 첫 슬로건을 윗물 맑기로 내 건 것 자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중 중심의 개혁관에서 슬로건이 나왔다면 맑은 샘 터뜨려 썩은 윗물을 갈아내자로 표현됐어야 했다. 보다 정확하게는 아랫물과 윗물의 동시 맑기로 표현됐어야 옳았다.

그러나 윗물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대중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5·16 직후 사용됐던 사회 기초질서 바로잡기가 대중에 대한 감시분위기로 추진되는 동안 대중은 개혁의 동반자로부터 멀어져갔고, 따라서 개혁은 험겨워지고 실종되기 시작했다. 정치개혁은 구 수구 세력과 신 개혁엘리트 간의 권력투쟁으로 축소되고 변질됐다. 아랫물들은 몸을 사리고 그게 그놈이라는 오래된 피해의식으로 더욱 멀어져갔다. 민주화의 주역이었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자발과 자율을 통한 신한국 건설에 주체가 되었어야 할 대중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역사 이래 쌓여왔던 개혁과제들은 정리돼야 할 호기를 놓치고 있다.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지역자치와 영역자치의 두 과제

정치개혁은 제도와 아이디어의 문제 이전에 사상의 문제이며 이는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룬 민주화는 아직 우리의 현실에 못 미친 미완의 민주화이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분권이다. 우리에게 남은 분권의 과제는 무엇인가? 수직적 분권이다. 중앙권력의 수평적 분권은 어지간한 상태에 도달했으나 수직적 분권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낱줄과 씨줄로 이뤄지는 민주라는 직물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낱줄을 만들어 씨줄과 짜는 것이다. 이 시대 민주화의 과제는 지역자

치와 영역자치의 성숙이다.

민주화의 의지가 있는 정부는 지역자치와 영역자치의 성숙을 위해 윗물 맑기를 해야 한다. 이 윗물 맑기는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다. 지역과 영역자치의 주체는 주민이고 윗물들의 나눔과 섬김은 아랫물인 주민의 맑은 샘 터뜨리기를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성숙한 주민자치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이 주민자치야말로 새로운 시대, 변혁의 시대에 새로 태어난 대중운동의 최대영역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자치는 모든 주민(국민)이 참여하는 배움터가 된다. 이 대중의 참여와 성장이 바로 최대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이 내세운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고 무시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이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게 하겠다는 데도 내무부가 반대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현 정부는 민주화에 대한 전략단위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화의 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새롭게 떠오른 대중(주민)을 동반자로 맞이 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 정치개혁의 나머지 제도보완은 아이디어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의 각성과 참여가 없는 제도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 많이 배워왔다.

정치개혁과 시민운동의 만남

현 정권이 민의 참여를 개혁 프로그램 속에 넣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새롭게 떠오른 시민운동의 대표 단체들을 일찍부터 동반자로 선정하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동반자 역시 대중조직은 아니다. 아이디어와 이슈를 중심으로 언론을 매개로 한 전문가 집단들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 전문가 집단의 대표 주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로 정부기관의 주요 위치로 영입되어 가면서 미답지 않은 눈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사회운동이 정치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운동을 떠난 행위다. 사진은 민주당 당직자 회의.

층이 보내지기도 한다. 계급운동이나 관변단체 등 과거부터 있었던 단체를 제외하고 시민운동권에서 대중조직다운 단체는 아직 없다. 정부의 참모부와 민간 차원의 전문가 집단과의 교감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차원에서 대중이 있을 뿐이다. 결국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중은 아직 대상일 뿐 주체로서의 대중의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

시민운동이란 무엇인가? 생존시대,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구했던 대중을 우리는 민중이라고 불렀고 이들의 운동을 민중운동이라고 불렀다. 생존에서 생활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생활권(삶의 질)을 추구하는 대중이 이 땅에 새롭게 출현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운동을 우리는 시민운동이라고 부른다. 시민운동은 그렇기에 운동 주체의 성격, 전략과 전술, 지향하는 목적성이 과거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더 긴 안목에서 시민운동 역시 사회운동의 큰 영역 안에 있으며 사회운동의 보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운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사회의 변화다. 누가 주체인가? 민(民)이다. 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사회변혁운동이다. 여기서 관과 기업과 정당의 직접 관여와 간섭은 배제된다. 이들과 사회운동은 서로 대등하며 그 가운데 협력과 보완이 있을 뿐이다. 사회운동은 다른 분야로 대치될 수 없는 사회발전을 위한 고유의 임무와 영역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을 향해 발전한다는 단계설은 위험한 논리다. 그렇게 될 때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에 종속되고 배출구조로 전락된다. 오히려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의 모태이며 기반이다.

극단의 정치주의 의식구조에서 사회운동을 하부구조로, 동원구조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사회운동이 정치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운동을
 떠난 행위다. 사회운동이 말을
 정치개혁은 정치권이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
 시민운동단체와 지도자가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더 이상
 사회운동에 개입하거나
 지도하려는 지배의식을 버려야
 한다.

데 이는 모태를 죽이고 토대를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다. 사회운동 경험이 정치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정치운동의 하부구조, 배출구조는 아니다. 더구나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겉모습을 사회운동체로 꾸미고 있다면 결국 사회운동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사회운동을 부패시키게 된다.

사회운동은 다른 운동영역을 위한 일회성 소모품이나 발판이 아니다. 또는 지도적 개인이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우도 참으로 문제가 된다. 위장된 사회운동이나 불분명한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악성종양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정치가 대중에 의해 불신받고 있는 풍토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를 개인이건 집단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법 이전에 사회운동의 도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초가 결여된 한 요인으로 80년대 혁명운동의 흐름이 가져왔던 오류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대중조직은 전위조직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상호간에 철의 결합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혁명시기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래야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원화되어가는 생활 시대에 그 이론은 너무나 낡았다. 또 한 요인으로 권력에의 의지를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 정치분야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날의 우리 상황이다. 권력의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볼 때 지난 시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란 정치권력 외에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돈이건 조직이건 모든 것을 털어서 정치권력에 쏟아부어야 했다.

그러나 다원화 사회에서 권력도 다원화된다. 정치권력, 사회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정보도 도덕도 권력이 된다. 사회운동은 사회권력, 즉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

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권력의 다원화야말로 진정한 또 하나의 영역자치로서 분권을 의미하며 민주화인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다원성을 정치권력 하나에 종속시키려는 정치주의는 어떤 개혁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비민주 내지는 반민주라 불리워 마땅하다.

사회운동이 정부의 하부구조가 될 때 관변단체가 되고 정치운동의 하부구조가 될 때 어용단체로 전락된다. 단순 보완구조가 될 때 하청 서비스운영 단체로 운동성과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며 도덕에 기반한 신뢰를 잃는다. 배출구조가 될 때 스타탄생을 위한 명망가 운동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사회운동은 사회발전을 위한 독립된 구조이다. 바로 이 인식이 사회운동의 중심성이며, 이 중심성이야말로 오히려 정치운동의 모태이며 토대가 된다. 사회운동의 정치개혁은 우선 자체개신과 강화를 촉진시켜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민운동 자체의 개혁과제

시민운동 역시 변화된 한국사회에서 모든 영역에 개혁이 요청되듯 자체 개혁의 요청이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건강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사회운동은 변화된 이 시대에 지양해야 할 몇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대변인 운동(예언자 운동)의 전통이다. 군부독재시절 민중은 침묵의 바다일 수 밖에 없었고 민중의 아픔을 외쳐줄 대변인이 필요했다. 민중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성명서 발표가 바로 감옥으로 이어지는 시대였다. 그러나 대변인은 대중과 심정 차원에서 맥이 닿았을 뿐 대중조직의 대표는 아니었다. 이 대변인 운동 전통은 일정한 기여와 함께 대중의 건강성을 동반하지 못한 채 스타를 탄생시켜왔다. 이 스타들의 상당수가 정치영역으로 진입되어갔다.

둘째는 해결사 전통이다. 사회문제와 갈등이 있는 곳에 대중이 모여 공론이 나눠지고 수렴되는 운동방식이 아닌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해결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다. 언론은 초점을 맞추고 대중은 구경꾼이 된다.

셋째는 참모부만의 운동이다. 참모부는 대중조직의 한 부서일 뿐이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언론에 연결하여 여론화를 중심으로 운동한다. 10여 명이 모여 이슈를 터뜨리곤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보도된다. 그들은 촉매를 들고 대중은 구경을 한다.

넷째는 지나치게 언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여론화는 절대 필수이다. 그러나 언론에 의존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언론에 대한 증독현상도 깊어진다. 사회운동은 과정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남이 알아주건 아니건 뜻을 펴는 고집의 운동이다.

끝으로 전통은 아니지만 근래에 형성된 나쁜 행태가 헤게모니 지향성이다. 헤게모니는 부부가 아이를 놓고도 일어나리만치 일상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헤게모니가 운동을 분열시키고 서로 해칠 만큼 격렬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수렴시키는 연결언어가 바로 대중성이다. 사회변화는 제도와 함께 구성원 즉 대중의 변화 발전이다. 대중의 참다운 변화는 간접경험만이 아니라 직접참여에 의해 확실히 보장된다. 사회운동은 그러므로 제도를 향한 도전(제도개혁기능)과 대중 개개인을 향한 변화(교육기능)의 양 목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네트워크론이 유행하면서 대중조직이 더 폄하되는 경향이 있는 데 네트워크가 조직(관계)을 확일성과 종속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발전된 기기 등을 활용하여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소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회운동의 중심 형성을 향하여

정치의 세계는 결과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며 사회운동의 세계는 과정의 가치가 지배

하는 곳이다. 어느 존경받던 민주인사였던 지금은 알려진 한 정치인이 자기 행동을 규정하는 제일 요소는 다음 선거의 당락에 대한 영향이고, 두번째가 당, 그리고 세번째가 국가라고 하는 고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개혁의 과제는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그 말은 분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사회운동이 정치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운동을 떠난 행위다. 사회운동이 말을 정치개혁은 정치권이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 시민운동단체와 지도자가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더 이상 사회운동에 개입하거나 지도하려는 지배의식을 버려야 한다. 더구나 현실정치의 역학관계로 보아 기존의 당에 줄을 서려고 하는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잘 되면 사회운동과도 낭비없는 협조관계가 맺어지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또 바라건대 형식과 내용의 확실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닐 경우 서로 소모와 낭비를 맺가로 지불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은 변화된 시대를 맞아 고유한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 시민운동의 전 영역에서 무엇보다 자기 중심을 형성해야 한다. 시민운동 중심 형성을 위해 시민운동의 철학을 정리하고 시민운동의 순수한 정예를 발굴하고 걸집시키고 대중성에 기초하는 운동 방법론을 더욱 많이 개발하고 실험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다른 부문의 중심에 의해 이용되고 동원될 것이다. 시민운동은 이제 주어진 각 과제의 해결과 동시에 시민운동 중심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변인 운동, 해결사 전통, 참모부만의 운동, 지나친 언론의존, 헤게모니 지향성 등은 우리시대 사회운동이 지양해야 할 '전통'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수렴시키는 연결언어가 바로 대중성이다.

“시민운동, 정치참여에 나서야”

유종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실장이다.

시민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탈정치화, 비정치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시민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자체를 개혁하는 일까지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한국의 정치개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시민운동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세력화를 지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파행이 심각함에도 시민운동은 이를 방관하기만 한다면 이는 시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운동은 정부의 실패, 나아가서 정치의 실패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항하고 이를 보완하는 운동이다. 즉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여 정부와 국회 등을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운동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물론 시민운동은 사법부와 언론, 기업 등이 시민생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때에도 이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를 수호한다. 또한 정부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도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독재정권 하에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독재권력 하에서는 보통시민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민주화운동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독재정권 하에서는 학생운동과 소수 명망가들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시민은 학생운동과 재야민주화투쟁에 대해 심정적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87년 6월항쟁의 경우와 같이 보통시민들의 민주화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5.6공 정권 하에서 전개된 KBS 시청료납부 거부운동과 교육민주화운동 등은 일반시민들과 교사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교육민주화를 고리로 하여 정권의 반민주성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하지만 독재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운동마저도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비당파적인, 그러나 정치적인’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은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가운데서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시민운동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부동산투기가 최대의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89년에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출현했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환경파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부동산투기 억제나 환경보전과 같은 일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기독교 세력의 입김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이 출현했던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제도와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고 시민들의 생활운동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대해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시민운동도 출현했다.

이렇게 보면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비정부, 비정당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성격을 ‘비당파적인, 그러나 정치적인 (non-partisan, but political)’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현은 시민운동의 일반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가 있다. 시민생활 운동이나 의식개혁운동과 같이 비정치적인 시민운동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민운동은 비정당적인 정치 또는 시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의 실패에 대해 이를 해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진은 '정치개혁 시민연합' 발기인대회

결하려는 운동이 정당의 형태를 띠지 않고 비 정당적인 시민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정당의 역할도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어 왔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많은 나라들은 혁명정부와 당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으나 머지않아 혁명의 신화는 붕괴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장기 집권한 북구의 국가들도 복지국가의 신화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실험을 한 국가에서도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유엔이 리우 환경회의나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등에 비정부기구(NGO)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한 것도 바로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시민운동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치만능주의와 정치냉소주의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치만능주의는 세계사적 경험을 통해 그릇된 것이 판명됐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상당히 선진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민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폭 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정당보다도 시민단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다. 특히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시민운동을 지나치게 탈정치화, 비정치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일은 결국 정부와 국회에 귀결된다.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를 외면하고 사회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는 결코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와 잘못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자체를 개혁하는 일까지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에서 '87년 6월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급속히 발전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크다. 그

시민운동이 개혁적인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하는 방법은
시민운동 지도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길과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런데 이제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민운동은 정치권 자체를 개혁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을 요구받게 됐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시민운동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세력화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아직은 시민운동이 미약한데,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정치에 나서면 시민운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서 정치에 관한 문제는 아예 시민운동이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파행이 심각함에도 시민운동은 이를 방관하기만 한다면 이는 시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운동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개혁과 시민운동의 세가지 과제

정치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일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보여준 담합과 개리맨더링은 정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한 기존정치권에 맡겨두어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제도와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민주적인 정당제도의 촉구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지역구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최고 5.9대 1에까지 이르고 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적어도 3 대 1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소선거구와 전국구제도는 대표성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온다. 적어도 전국구제도만이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국구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당선자 숫자를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또는 전국구후보 명단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선거구 하에서의 대표성 왜곡을 확대재생산하게 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정치의 발전을 기할 수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각 정당이 전국구 의석의 배분을 위해 모든 지역구에 무리하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과 노동조합법도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세계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적어도 19세로 인하여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학·경력 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학력과 경력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허위학력과 경력을 기재해도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고 설혹 상대후보 진영에서 이의제기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 후 공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선거 막바지에 공고를 한다 해도 대다수 유권자에게는 거의 알려지기 어렵다. 따라서 후보자는 후보등록시 학력과 경력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이를 심사하도록 하며, 허위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당선무효 등 엄격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대신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연도에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간에, 그리고 정당간에도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회를 다액소수제에서 소액다수제로 전환하는 한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야 마땅하다.

정당의 개혁은 제도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화하고 민주적인 공천절차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정치 의식의 개혁을 위한 운동이다.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극복하도록 하고 선거시에는 정책에 따른 투표를 함은 물론 평소에도 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입법운동이나 의정감시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인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치세력의 형성에 기여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7년 대선시 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 실패, 민주세력과 군사정권세력이 야합한 3당합당, 지역주의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민주화와 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시민운동이 개혁적인 정치세력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개혁적인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하는 방법은 시민운동 지도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길과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새 정치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지금까지 여러 영역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정책대안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정당의 체질을 바꾸어 당내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선출과정에 당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인 정책정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다. 정당의 간부나 지구당위원장, 공직선거 후보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속한 보통시민들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의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야 민주적인 정책정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자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회원들부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되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캠페인은 참여적인 당원들을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 출현의 의미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정치개혁시민연합, 희망의 정치를 여는 젊은 연대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출현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운동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치세력화에 직접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한국의 정치개혁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의 출현은 기존 정당들에게도 자극을 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지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통시민들에게 당원이 되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단체밖에 없다. 기존 정당들이 시민과 유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에 보통시민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없이는 소수의 선각적인 지도자들에 의한 새 정치운동은 실패하기 쉽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도 시민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옹호를 깨뜨리려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여론과 압력이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여야 정당들에게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서 중앙정치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인 방관자가 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시민의식개혁운동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참여**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지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통시민들에게 당원이 되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단체 밖에 없다.

독일 녹색당으로부터 배운다

윤도현
한양대 사회학 강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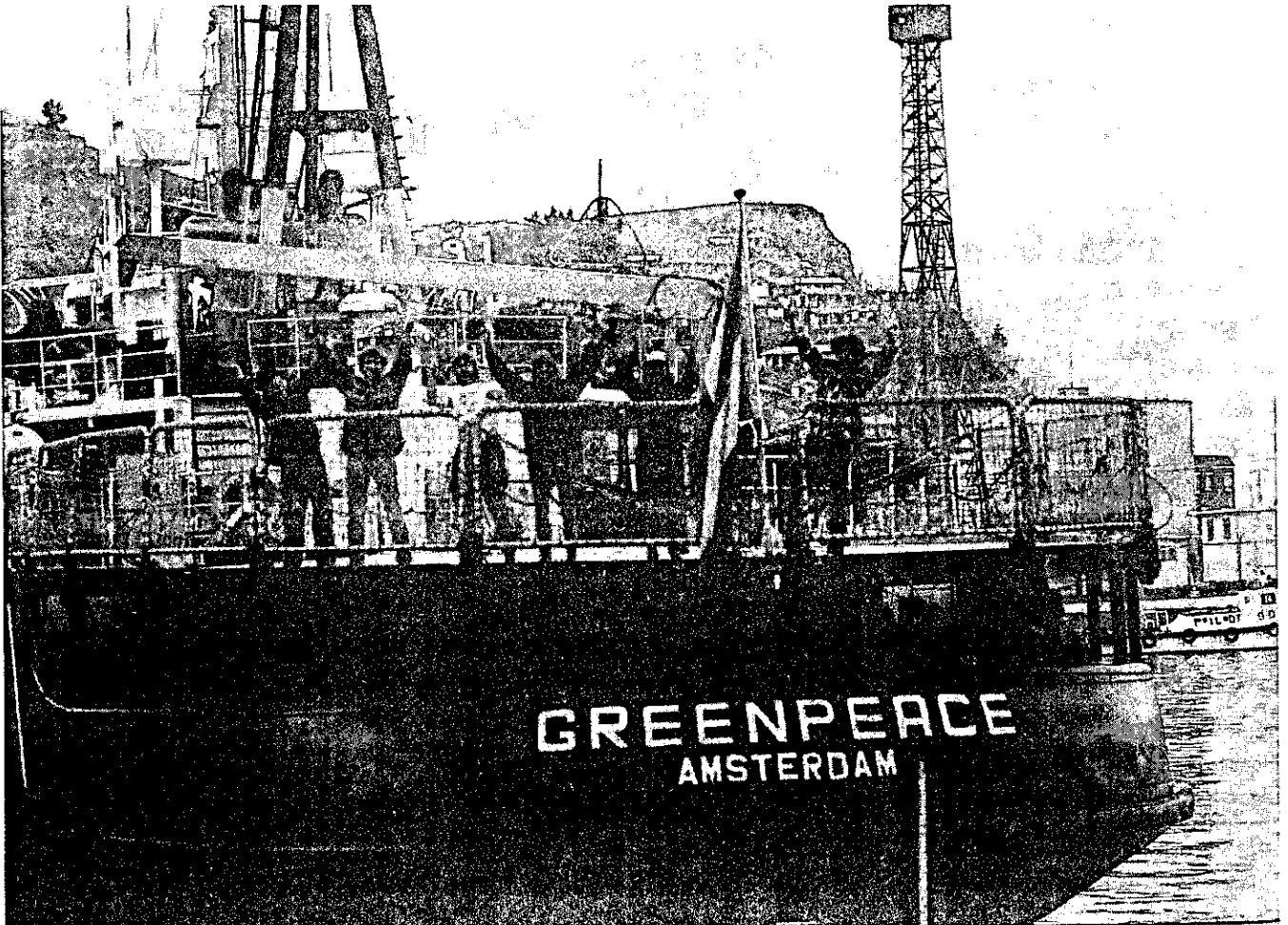
‘혁명적’ 전망만을 강조하거나 ‘시민운동 만능론’을 주장하는 양 극단 속에서 시민운동의 제자리 찾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최근 쟁점으로 등장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관련, 독일 녹색당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 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그 중 나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고 싶다.

우선 첫째로 '87년 민주항쟁 이후 일련의 의사민주화 과정, 그리고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그동안 국가에 의해 억눌려왔던 사회 제 집

환경운동의 모태에서 출발한 독일의 녹색당은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의 부재로 현재는 소수당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그린피스 환경감시 활동.



단들의 이해가 표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대신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국내적 조건과 함께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외부적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진영에는 기존의 계급중심적, 변혁지향적 발전 전망에 대한 회의가 확산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간과했던 시민운동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고 싶은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 '87년 이후의 임금인상,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대중적 소비, 여가, 문화 영역의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일정한 정도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미리 밝히지만 나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애써 눈 감으며 여전히 '혁명적' 전망만을 강조하는 입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정반대로 이제는 "시민운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식의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자가 시민사회는 기존 체제의 유지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포섭되어 있다고 보면서 시민들의 성장하는 민주적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다면, 후자는 역으로 시민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나머지 시민운동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민중운동 무용론, 시민운동 만능론'이라는 단편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고 본다.

시민운동이 노동문제 외면해선 안 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우선 시민운동은 기존의 민중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이제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여러 중요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환경, 여성, 교통문제 등은 시민운동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분야들이

다. 또 시민운동은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 등을 제고시키고 많은 시민들에게 전국적, 지역적 차원의 운동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막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시민적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 권리의 확보에 시민운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민중적 과제를 은폐, 호도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체제를 보호, 유지시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그가 예를 들듯이 시민운동 일각에서의 노사 화합, 산업평화의 강조는 현재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노사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 내에서 이러한 경향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서구의 국민들이 누리는 많은 민주적 권리들 그리고 높은 복지수준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기존 지배권력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하나하나 쟁취해 낸 것이며, 여기서 민중운동이나 노동운동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환경, 여성문제 등의 대부분은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문제의 해결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않지만 노동문제를 외면해서는 시민운동은 어떠한 커다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독일 녹색당의 경험이 주는 교훈

한편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독일 녹색당의 경험을 예로 들고 싶다.

독일 녹색당의 경우처럼 어느 시민운동세력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 제도정치무대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사회의 전 부문에 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적 대안의 개발이 없는 한 그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한정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은 바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차이 속의 연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적어도 양자간의 불필요한 대립구도 만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다. 양자가 모두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녹색당은 처음에 환경문제 그리고 급진적 민주주의를 들고나오면서 제도정치에 진입한 이후 초창기까지 급속한 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정당정치 무대에서 녹색당은 더 이상 별로 세를 늘리지 못하고 대략 전체 유권자의 5~9% 사이의 지지율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녹색당이 내세웠던 환경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신선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당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민당, 사민당 등 다른 정당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녹색당의 환경정책 및 기타 다른 정책들(예를 들어 외국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근본적이고 급진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성 역시 구체적인 대안과 연결되지 않으면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힘들다. '89년 초 베를린에서 녹색당은 사민당과의 연정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사민당의 환경보호 기준이 자신들이 보기에 턱없이 낮은 것이어서 이에 동조하고 연정을 하느니 차라리 연정에 참여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으로 이를 감수하고 연정에 참여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녹색당은 연정에 참여했다. 만약에 당시 녹색당 내 근본주의자들이 내세운 환경기준을 사민당이 베를린에 적용했다면 베를린의 주요 산업 등은 과다한 환경보호비용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고용감축, 다른 지방으로의 이전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는 다시 베를린 자치정부의 조세수입을 악화시켜 사회간접시설 비용, 복지비용의 감축을 야기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녹색당 내 일부에서 고수하고자 했던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은 매우 복잡하며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앞의 경우 환경문제는 지역경제, 일자리, 지방자치 재정, 복지문제 등과 긴밀히 얽혀 있다. 따라서 녹색

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대하려면 기존 기민당, 사민당의 정책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만 한다.

민중운동과의 '차이 속의 연대' 필요

한국의 시민운동은 물론 서구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적 한계는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즉 시민운동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 감시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또 추진하는 데는 정치정당 또는 노동조합에 비해 그 조직적, 실천적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은 필히 민중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사민주의적 정당과 협력해야만 한다. 또 독일 녹색당의 경우처럼 어느 시민운동 세력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 제도정치무대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사회의 전 부문에 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적 대안의 개발이 없는 한 그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한정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은 바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차이 속의 연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듯 걸으로도 자명한 논리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양자간의 불필요한 대립구도 만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다. 양자가 모두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참 여 연 대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

-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 대토론회

지난 6·27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투표현상'의 재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기대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YS정권의 개혁 후퇴와 일관성 없는 정국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은 집권당에게 유사 이래 가장 처참한 선거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은 이를 수렴할 현실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등권'을 표방한 지역주의 정치논리에 의해 굴절되고, JP의 정치적 재기마저 허용하는 지역분할구도로 귀착되었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90년 3당합당 이후 가장 격렬한 파열음을 내며 전개되고 있다. 흔히 '후삼국 시대'의 도래라고 표현하듯, 90년 3당합당으로 단선화 되었던 정치지형에 3김 과두체제를 기본축으로 한 핵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민자당의 선거참패와 집권 2주기를 위한 내부정비 및 개편, 제1야당의 분열과 신당의 탄생, 자민련의 약진, '3김청산'과 '세대교체'를 표방하며 정치화하고 있는 시민세력의 움직임은 96년의 총선과 이후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숨겨진 권력투쟁의 진행을 예상케 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이러한 정국변화에 직면하여 정국변화의 본질적 동인을 객관화 하고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정치토론을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민자, 민주, 새정치국민회의 등 3당과 정치개혁시민연합이 주제발표로 참가하였으며, 시민·사회운동의 주요단체 지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본지에서는 각 주제발표의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 수록한다.

주제발표

손학규(민자당 대변인·국회의원) 임채정(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성유보(정치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정리

박원석/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이다.

1.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그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손학규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는 권위주의의 또 다른 유산이면서 권위주의 청산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화될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이다. 권위주의의 유산으로서의 지역주의가 道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인적 요소에 의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선거결과 나타난 지역분할주의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암운을 드리웠다. 세대교체론, 지역등권론, 내각제 등 중앙정치의 쟁점들이 생활정치와 방안들보다 더 크게 부각됨으로써 지방선거라기보다 총선, 대선에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었다. 구체

적으로 이러한 지역할거주의의 심화는 지역분할구도의 틀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정 정치지도자들의 행동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정당정치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몇 개의 지역당이 나라를 분할하는 형국이 되었다.

임채정 지역갈등은 지역차별의 소산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지역차별은 5공, 6공, 김영삼 정권을 통해 지역연합으로 강화되면서, 이른바 호남 포위전략으로 발전하였고, 선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정권창출의 도구로 채택되었다. 심화된 지역갈등은 선거에서도 어떠한 이념이나 정책보다 앞서 자기 고향 출신에게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제1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근대적 정치발전의 필수요건인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이란 주제의 시국 대토론회

이념 또는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적 연고에 따른 지역주의에 매몰되고 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정당의 건전한 발전이 제약당하고 있다. 지난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역갈등과 분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명백한 증거였으며 각 지역주민들이 국가나 집권세력에게 지역갈등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권력을 조직함으로써 등권적 지방정부를 통해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갈등은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한 편파적인 중앙권력의 국정운영 기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균형잡힌 지역개발과 공정한 인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지역갈등 해결책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소외지역 출신의 정치지도자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제정구 지역주의의 뿌리엔 6·25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 있다. 당시 최후방어선이 낙동강을 따라 고어짐으로써 육군사관학교가 진해에서 4년제 교육을 처음 시작했다. 영남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 육사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했고 5, 6공까지 도합 30여년간 군 출신을 필두로 영남인맥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파워엘리트로 군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남 우대, 여타지역에 대한 소외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국민들의 의식을 근대적 시민의식으로 발전시켜 가는 데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선택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에 대한 비판이 별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비판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6·27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 그리고 그에 고무된 김위원장의 신당 창당은 그나마 가치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씩 진전되어가던 시민의식을 지역중심적, 거물정치인 지향적으로 또 다시 퇴행시켜버렸다.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쟁점과 대립점이 뚜렷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대안으로서 적극 제시하고, 인물 중심의 대결로 돌아간다면 현재에 같은 지역구도에 충분히 파열구를 낼 수 있다.

성유보 '3김'은 그 누구나 농민, 노동자, 화이트칼라, 중소기업인, 재벌, 여성, 청년 등에서 골고루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 '3김' 지지세력들은 다같이 '3김'이 내걸고 있는 어떤 정책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향사람이기 때문에 표를 던진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는 "국제화다" "세계화다" "선진화다" 등 하며 최첨단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정치상황은 중세 봉건주의 체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절대권력, 독재권력은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최측근 집단을

갖고 있다. 그것은 혈연일 수도 있고 지연일 수도 있고 학연일 수도 있다. 우리의 지난 날 독재는 그중에서도 특히 지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지역편중과 소외현상이 독재권력의 붕괴 이후 지역분할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YS는 본능적 정치감각으로 이같은 현상을 감지하고 호남 대 비호남구도로 문민시대의 첫번째 대권을 쥐었다. 그러나 YS의 1차적 권력 근거지가 부산·경남인 만큼 권력배분에서 PK세력이 중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패권주의이다. DJ의 지역동권론, JP의 충청도 핫바지론은 YS의 지역패권주의 정치 때문에 지난 6·27선거에서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준 것이다.

2.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가?

손학규 세대교체는 정략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우리의 과제이다. 단지 몇몇 정치인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과 변화속에서 우리의 정치체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커다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경쟁속에서 선진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인 효율성만을 생각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견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민주화 시대에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누릴 수 있었던 권한과 영예, 권력을 계속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계의 변화속에서 우리 사회를 개방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세계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인재들의 등장과 수용이 세대교체의 핵심이다. 사고의 전환을 정치적인 구조와 인적 구성속에서 보이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세대교체이다.

임채정 3김청산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세 정치지도자를 동일시하는 개념의 조작이다. 3김씨는 과거 정치활동과 행태, 정치지도자로서의 성장과정, 공과 및 평가가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들 3인을 한마디로 '3김씨'라고 추상화함으로써 그 구체적 차별성을 호도하고 막연히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또한 3김청산이라는 구호 속에는 실제적으로 김대중 씨의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책략이 숨겨져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산대상

이 될 수 없다. 김종필씨는 자민련을 창당했을 때 김대중씨처럼 언론이나 정치세력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발을 받지 않았다. 3김청산이나 세대교체는 하나의 구호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 노선도 아니고 대안도 아니다. 세대교체론자들은 '교체'만을 주장할 뿐 누가, 왜, 차기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씨가 단지 오랜 세월 동안 야당을 대표했으며 나이가 많다는 주장은 하나의 정서일뿐 논리는 아니다. 세대교체론은 매우 다양한 색채를 띠고 다양한 기반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재야적 개혁노선에서부터 민자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파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파도 그 당위성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교체론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김대중씨에 대한 비교우위를 입증해야 한다.

제정구 세대교체란 구태의연한 과거정치의 유습(계보정치)과 정치행태에 젖은 자들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열주의와 파당정치에 젖은 정치인들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다. 3김이 노년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정치행태, 고질화된 정치적 체질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극복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조차 너무나 이 보스 중심의 정치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냉소에 빠져, 본질과 현상, 진실과 위선을 더 이상 구분치 않기로 아주 작심한 듯하다. 우리부터 이런 패배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반3김의 기치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스스로도 '反3김'이라는 기치만으로 한 정치집단이 자신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타테제가 아니라 진테제(synthese)를 내걸어야 한다. 우리가 반3김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책의 정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계보정치를 철저히 깨뜨리고 정책과 노선으로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그로부터 피이드 백(feed back)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유보 막연한 '세대교체론'은 현 정치상황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결코 될 수 없다. 특정세대 또는 특정세대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이 나선다고 해서, 3김씨보다 더 젊다고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또 그 대체될 세대라는 것이 60대인가, 50대인가, 40대인가, 아니면 30대인가? 지금 기성 정치권의 주류는 5·6공 군사독재 시대 이래의 구시대 정치인들이고, 아니면 3김 지역맹주 중 어느 1김의 가신(家臣)집단들이나. 만약 지금 당장 3김씨가 정치현장에서 동시에 퇴장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기성정치인들 중 중간적 리더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당장 자기 지역으로 달려가 “내가 이 지역의 새로운 정치적 맹주요”하고 맹주다툼을 벌일 것이다. 핵심은 정치인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낡은 정치의식과 전근대적 정치구조, 정당구조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연, 혈연, 학연과 같은 부족국가적 정치동류의식의 대전환, 카리스마적인 특정 정치인을 정점으로 하향적으로 형성되고 이 합집산하는 비민주적 정당구조의 민주적인 상향적 정당으로의 전환과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공정한 경쟁 등 새로운 정치풍토이다. ‘세대교체’-이것은 현재의 카리스마적 지역 맹주정치를 극복하는 필요조건일지는 모르나 결코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3. 김영삼 정부의 집권 1기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 및 방식의 개혁이 필요한가?

손학규 현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은 과거의 정치권력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관계가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중상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지금의 경제성장을 일으켰지만, 개방화와 자율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서 나오는 어려움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구조적인 모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구조를 같이 안고 있다. 그것이 현실에서 부딪칠 때 모순구조를 낳게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현 정부는 안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조용하고 그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개혁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물론 변화와 개혁이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나, 김영삼 정부가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기본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 집권 1기 개혁의 기본 방향이 첫째는 민주화, 둘째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였다면, 이제 집권 후반기의 개혁방향은 지방화와 분권화를 완성하는 민주주의, 효율성과 세계화에 기초한 선진화로 집약된다.

임채정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개혁은 기본적

으로 과거청산과 새로운 질서창출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과거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켰던 법과 제도, 가치관, 인물 등에 대한 청산이 그 하나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낡은 기득권세력과의 통합을 통한 정권창출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과거청산을 철저히 수행할 수 없었다. 과거청산의 불철저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 역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질서는 최소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평화적 통일의 추구, 경제정의의 실현, 국민생존권의 보장 등을 목표로 선정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이상의 4개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문민정부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의회기능의 약화, 여야대화의 부족,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언론의 장악 등에서 보이는 행태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통일문제 역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집행과정에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제 역시 재벌 중심의 경제운영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위축을 초래했고, 부의 배분문제도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국민생존권 또한 복지정책의 후퇴와 농어촌정책의 부실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후반기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은 전반기 때와 달리 단기적 인기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탄탄한 국기를 형성하기 위한 원대한 시각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정파를 넘어서는 큰 정치를 실현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분명해야만 한다.

제정구 한 마디로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실패했고, 이대로 간다면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YS의 문민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가 온전히 수구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3당야합의 태생적 한계를 일찌감치 우리는 모두 예견했던 것이다. 즉, 처음부터 개혁의 주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한 개혁의 철학과 마스터플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를 ‘손 보고’, 불쑥불쑥 갑작소를 벌여서 잠깐씩 신문에 톱을 차지해 인기 오르는 걸 즐기는 듯한 태도로 비칠 때, 국민들은 금세 외면 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개혁이란 말 자체를 희화화(戲畵化)해버리는 과오 또한 저질렀다. 국민들이 개혁의 진정한 의미와 성과를 느끼기도 전에 개혁주의에 대한 냉소를 먼저 머금게 돼버렸다. 이 모든 것이 YS 역시 1인 중심의 계보 보스로서 자파의 勢 유지, 확장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낡은 정치의 한 성원에 불과한 데서 기인한다. 이로써 또 다시 한 계파의 수뇌에게 국민적 통합과 국정 전반을 책임지우는 우를 범해

서
관
들
다.
권
수
능
의
보
권
했
대
는
책
벌
부
복
는
추
진
기
력
의
부
족
이
기
때
문
이
다.

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따라서 YS의 개혁이 지금이라도 케도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개혁, 자율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의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의 재정비부터 전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성유보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대한 후일의 역사적 평가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부정부패의 상대적 감소, 금권정치 폐해의 감소,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도입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의 성과도 현재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지않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부정부패는 하위직 공무원들에서부터 술술 되살아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기성정치권 사이에서 '깨끗한 선거'에 대한 불만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여러 음성적 방법으로 법정선거자금을 초과해서 쓴 후보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얼마 전 '4,000억 비자금설'이 여론을 들끓게 했음에도, 차관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린 것이 단적으로 증명하듯이,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또한 선언적 의미 정도로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것은 크게 몇 가지 원인이었다. 그 하나는 개혁 프로그래머들의 조직적 팀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혁을 시행해야 할 행정조직의 상층부가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있으므로 해서 시행의지가 박약하였다. 셋째는 개혁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보완할 점을 점검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개혁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잡아당기는 보수적 구조의 정당이라는 점이다. 다섯째는 기성정치권 전반의 보수 끌어안기 경쟁이라는 분위기다.

4.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에 대한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가?

손학규 정치체제 개혁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보다 나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정부제도가 무엇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의의 심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요소가 뒷전에 밀려난 한국의 정치체계를 개혁하려면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중대선거구 제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위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두 석에 불과하더라도 영남에서 신당이, 호남에서 비신당이 의석을 차지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또 다른 방편으

손학규
중대선거구 제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두 석에 불과하더라도 영남에서 신당이, 호남에서 비신당이 의석을 차지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임재정
왜곡된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대적 진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을 추진하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해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갖고 꾸준히 연구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제정규
지역분할지배와 계보정치에 맞서야 한다. 적어도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당선되는 데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 지금의 수구 대 개혁의 대회전에서 모든 개혁세력은 대거 현실정치권으로 진입해야 한다.

성유보
카리스마적 영웅정치시대에서 시민정치시대로 전환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개혁해나갈 수 없다. 시민세력이 모태가 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로 행정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분할구도 타파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도로 하나를 끼고 한 지역은 완전히 한 당 일색의 정치구도가 이뤄지고, 다른 한 지역은 다른 당 일색의 정치구도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정치구도이다. 한편 신당의 김대중 위원장은 대통령제를 신당의 정당정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내각제로 나타나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각제 논의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것보다는 얼마만큼 권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발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증한다. 내각제 논의는 지역주의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정치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통합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책임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정당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체정 왜곡된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은 바로 6·27 지방선거 결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패권에 기반한 특정지역의 정권독점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도 수직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를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단지 기득권 연장을 위한 '인물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다른 한편 문민정부도 출범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지역연합을 기초로 한 정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지난 50여년간 왜곡된 정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평적인 정권교체와 관련해서는 먼저 민주세력을 비롯한 모든 세력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당선 가능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아울러 상대적 진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을 추진하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해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갖고 꾸준히 연구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제정구 지역분할지배와 계보정치에 맞서야 한다. 현재의 계보정치에 입각한 정치행태, 그리고 지역분할에 기초한 집권전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5대 총선에서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적어도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당선되는 데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 개혁세력은 더 이상 바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실체로서

자신을 국민들 앞에 정립, 정면 돌파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란 그저 언젠가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낡은 것을 타파하고 체결할 때 그 힘에 근거해 수립되는 것이다. 지금의 수구대 개혁의 대회전에서 모든 개혁세력은 대거 현실정치권으로 진입해야 한다. 혼란하고, 암울한 지금 사태가 오히려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후보가 국회에 가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아니라 해당 지역당의 색깔을 띠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3김을 쫓아 물러가는 표를 돌려세워 힘있는 대안으로 정책과 양심을 갖춘 후보에게로 표가 모이게 해야 한다. 구당모임 및 기존 정치인 가운데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인사, 이미 전문적 정책력으로 그 성가가 높은 시민운동단체, 민민운동을 포함한 재야운동 가운데 구체적 정책을 갖고 현실정치에의 진출을 지향하는 세력이 결합, 상호보완되면 위력이 배가된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럴 때만이 힘있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

성유보 카리스마적 영웅정치시대에서 시민정치시대로 전환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합리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혁해나갈 수 없다. 이제 시민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할 시대에 왔다. 시민세력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 정책대안들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이를 책임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시민세력이 모태가 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칭)정치개혁시민연합은 이러한 과제들의 일각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치적' 시민운동이다. 정치개혁시민운동은 민간정책연구센터, 시민포럼 등을 만들고자 하며 이것이 발전되면 훌륭한 국가 Think-Tank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가칭)정치개혁시민연합은 이같은 정치적 시민운동에 기반하는 범국민적 개혁정당을 창출하고자 한다. (가칭)정치개혁시민연합과 범국민적 개혁정당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상호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정치적 시민운동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되면 우리 사회 정치권의 근대화, 선진화를 촉진 시킬 것이고 나아가 정치풍토 전반이 밝고 투명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시민적 민주주의가 출발할 것으로 확신한다. 